

“저도 사전투표합니다”



1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투표를 하고 있다. 3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도 투표를 하고 있다. 4 우범기(오른쪽) 전주시장과 배우자 주은경 씨가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김관영 도지사, 대선 사전투표 독려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효자5동 사전투표소에 김관영 도지사가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투표를 마친 김관영 도지사는 “한 표를 행사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전북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 혹시 바빠서 투표할 시간이 없을까 걱정되시나요? 그럴 때 일수록 사전투표가 정말 유용하다.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의 한 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 ‘내 한 표쯤이야’가 아니라, ‘내 한 표 덕분에 바뀔 수 있다’며, 도민들에게 소중한 권리 행사를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 힘찬 메시지를 전했다. /01민호 기자

“농업 말살 통상협상,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전농 전북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 전면 재검토 촉구 “쌀 수입 물량 확대 등… 국가 농업 근간 흔드는 조치” 농업·식량주권·국민 건강 최우선 전략 수립 등 요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진행 중인 농업·통상 협상에 대해 “농업을 말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굴욕적 협상”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농전북도연맹, 전농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전북본부, 전국한우협회전북도지회,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혁운동본부 등 6개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

리 체제에서 진행된 한-미 통상협상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 일방적인 관세 협정”이라며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까지도 장관급과 실무급 협상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이 기존 한-미 FTA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쌀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 △검역 기준 완화 및 무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러한 요구들은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결국



전농전북도연맹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진행 중인 농업·통상 협상과 관련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까지 흔들리게 만든다”며 “이는 국가의 보호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식량주권은 마지막 남은 방과제와 같다. 지금 무너

진다면 우리는 해외에 식량을 의존하는 불안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동안 무역과 FTA 협상에서 농업은 희생양이었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어 “줄리아 패키지로 불리는 협상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로, 협상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시한을 연기하고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 △농업과 식량주권,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통상 전략 수립 △줄리아 패키지 협상 전면 중단 및 전면 재검토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통한 미국 압력 대응 전략 마련 △농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완대책과 피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쯤은 모내기 등으로 가장 바쁜 농사철이지만, 우리 농업의 존립이 걸린 만큼 이 자리에 나왔다”며 “식량과 농업,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경제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조건부 사과 뒤

법적 대응은 위협”

민주 도당, 이준석 후보 겨냥

“비판 억누르려는 행동”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발언과 언론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 공보단은 “이준석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해, 시청 중이던 국민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공공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이 후보가 성 상남 의혹 관련 기자 질문을 거부하고, 보좌진이 기자를 제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타인에겐 검증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공보단은 “이 후보의 사과는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조건부 사과에 불과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언론과 여론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는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니라 비판을 억누르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공감 능력 없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에게 진정한 사과와 자책 재고를 촉구했다. /01민호 기자

민주노동당 도당 “이준석 후보

혐오 발언 책임져야” 비판

민주노동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9일 성명을 내고 “내란 퇴출에 이어 혐오도 퇴출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아 사무처장 명의로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당은 최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성폭력을 자국적으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검증을 빙자한 폭력과 막대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말 권리는 모든 것을 전지할 권리를 뜻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도 기준을 쌓아왔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그 기준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혐오 정치를 퇴출시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권영국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01민호 기자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국힘 선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

전북 방문… “자유대한민국 지킬 마지막 기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한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사실상 4심제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도는 사법부 장악을 통한 독재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권력이 법을 심판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과거에 실

망을 드러낸 적이 많다”며 비상계엄 논란과 당내 경선에 대한 혼선을 언급하고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픔을 뒤로하고 책임과 도덕성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길을 이길 사람은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이만호 기자

“사전투표로 정권 심판, 본투표로 승리”

민주 도당, 도민께 촉구… “이번 대선, 민주주의 회복·민생 정상화 위한 분기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도민들에게 촉구했다.

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5월 29일과 30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며 “사전투표로 정권을 심판하고, 본투표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공보단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언론 자유 위축,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를 훼손해왔다”고 비판하며,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를 겨냥한 계엄 시도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북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보단은 “청년 인구 유출, 농민과 서민의 소외, 참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려면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며 “준비된 후보 이재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공보단은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사전투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을 먼저 실천하는 일”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

전주시 사전투표 독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시 일원을 돌며 ‘사전투표 독려’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중화산 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진행하면서 “총보다 투표가 강하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윤덕 총장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12.3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윤석열 내란을 진압한 빛의 혁명과 광장의 연대는 이번 투표로 완성될 것”이라며 “가족들 모두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일원에서 사전투표 독려 활동을 이어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